
정책참고자료

2019-6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_____ 4
-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강릉 펜션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	

2 국민권익위원회

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_____ 6
----------------------------	---------

-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 분석...제도 보완 필요 -

3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고산업 육성 추진’	_____ 12
---------------------------------------	----------

-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 계획 공고 -

4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교육자치와 온종일 돌봄체계 달성한다.”	_____ 14
--	----------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총회 참석, 오산 돌봄센터’방문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뜻한 인공지능(AI)’을 향한 발걸음,	_____ 20
--------------------------------	----------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능정보화 사업’본격 추진 -

6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 1주년, 평화참여·젊음을 노래하다	_____ 23
---------------------------------	----------

- 3. 9. 평창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1주년 기념 포럼 개최 -

7 농림축산식품부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_____ 26
--	----------

-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지원·제도개선 방안 마련 결의대회 개최 등 -

8 환경부

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_____ 32
-----------------------------	----------

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

9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_____ 39
- 경기도 수원시, 전라남도 순천시, 대전광역시 등 16개 선정 -

10 여성가족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_____ 44
-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기관 선정(새일센터 전국 35개소) -

11 국토교통부

정부·지자체, 도로·철도·하천 등 노후시설 안전강화맞손 _____ 50
- 15일 <기반시설 관리 정책 관련 사도 간담회>서 적극 참여 당부 -

12 해양수산부

**해수부-환경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이기 함께 나선다** _____ 54
-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항만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협력과제 발굴·시행 -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강릉 펜션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 * (피해 현황) 고등학생 사망 3명, 중상 7명 / (사고 원인)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 ** 행안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소방청
-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 *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단,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제외)
 -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그리고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사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사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일산화탄소 누출(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 시공사등록증(등록 여부 확인), 건설기술자 자격증(본인 여부 확인)

○ 아울러,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외에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및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또한, 지난 1월말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대처과정에서 보여준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대처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통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라며,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 분석...제도 보완 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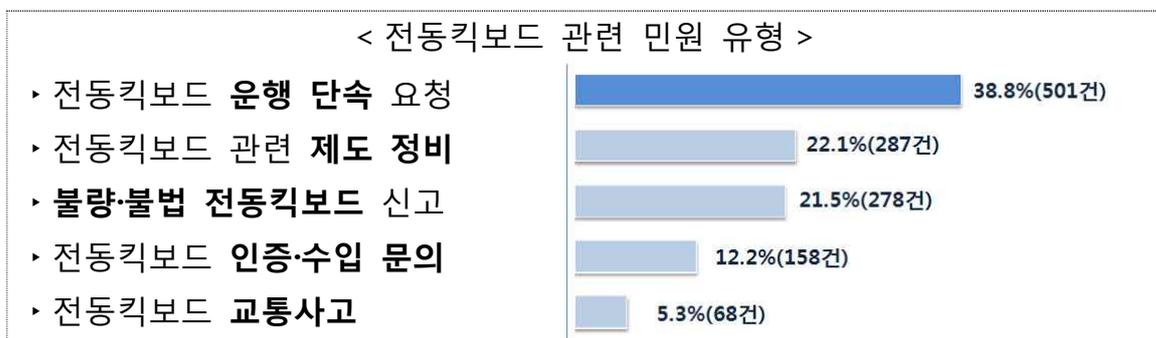
- 전동킥보드(Kick-board)* 관련 민원 중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8.8%로 가장 많아 전동킥보드 운행 도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개인용 교통수단 중 하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서울)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민원 유형별로는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22.1%,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21.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12.2%,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3% 순으로 나타났다.



□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의 경우, 자전거 도로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47.5% (23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산책로 등 공원 26.7% (134건), 인도 19.0% (95건) 운행 단속 요청이 있었고, 그 외 미성년자 운행 단속 4.8% (24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휴대 규제 1.2% (6건),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강기 내 운행 단속 요청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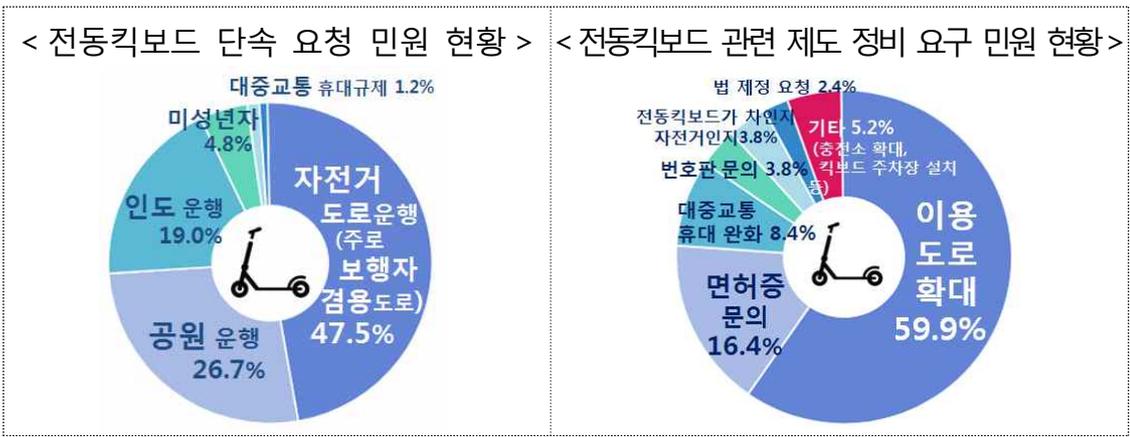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실제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77.3%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보행자의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와 관련해서는 차도 이외에 자전거도로 등으로 이용도로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59.9% (172건)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질의 16.4% (47건), 대중교통 휴대 완화 및 개선 요청 8.4% (24건)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별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별도법 제정 요청, 전동킥보드 충전소 확대, 주차장 설치 요청 등도 있었다.

지난 해 ‘자전거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면허증이 필요없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와 비슷한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차도로 운행해야 하고 면허증도 필요해 운행도로의 확장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대중교통의 경우, 운송사업자별로 전동킥보드 휴대기준이 상이하고, 같은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운전기사에 따라 휴대여부가 다른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불량 전동킥보드 제품 신고’ 중에는 안전 미인증 제품 제조·판매 신고가 60.1% (1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인증 제품 구매 대행 신고 20.1% (55건), 불량 전동킥보드 환불 요청 등 7.7% (21건), 전동킥보드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6.2% (17건), 속도 등 불법개조 신고 5.9% (16건) 등이 있었다.

제조사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로 설정해 판매하고 있으나 구매 후 판매자나 이용자가 불법 개조하는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불법·불량 전동킥보드 제품 신고 민원 주요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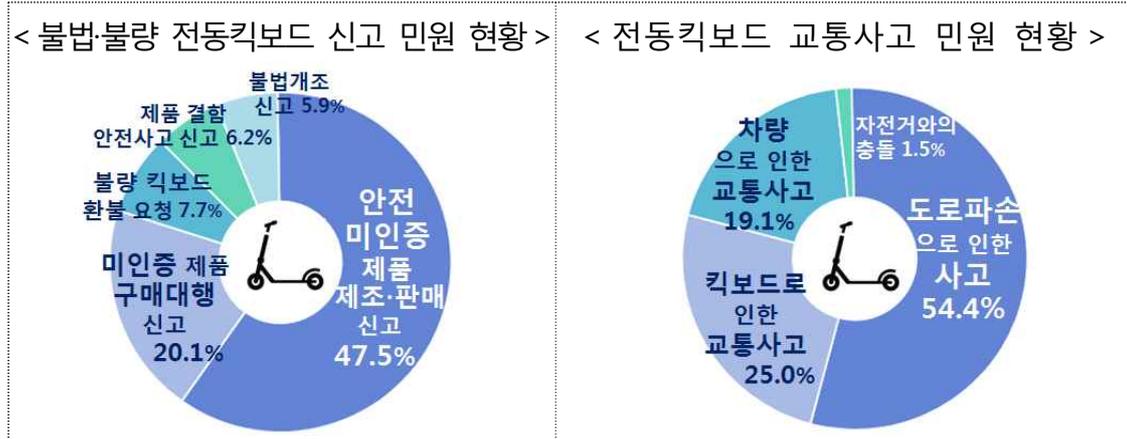
[전동킥보드 결함으로 사고 발생]

탑승 중 갑자기 전원 off로 인해 몸이 튕겨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판매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소비자 과실로 절대 기계 결함은 있을 수 없다며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네요. 결함이 있다면 소비자가 직접 밝히려는 말과 함께 계속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불법개조 판매자 신고]

○○ 자전거 매장에서 전동킥보드를 불법개조 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속 25km 이상 판매하면 불법인데 개조 후 시속 45~53km까지 나온다고 블로그에 홍보까지 하네요.

‘전동킵보드 교통사고’로는 도로 함몰, 균열, 맨홀 등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전동킵보드와 보행자 간의 사고, 전동킵보드와 차량 간의 사고, 전동킵보드와 자전거 간의 사고 등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교통환경과 법령은 자동차·자전거·보행자 등을 중심으로 구분돼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용자가 많아지는 전동킵보드, 전동휠 등 개인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불편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동킵보드와 관련된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경찰청, 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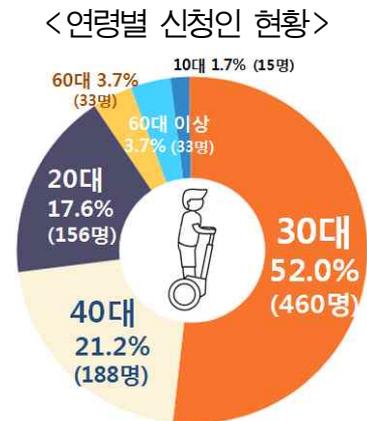
1 민원 추이

- 최근 3년간 ('16.1월~'18.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총 1,292건으로 월평균 35.8건 수준
 -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야외활동이 용이한 4월부터 증가하여 9월까지 지속되다가 겨울에 감소하는 경향
 -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단속요청 민원은 계절에 민감하고, 그 외 민원 (불량제품 신고, 제도개선 요청 등)은 계절 관련성 낮음



2 신청인 현황

- (연령별) 30대가 52.0%로 과반수이고, 40대 21.2%, 20대 17.6%, 50대 3.7%, 60대 이상 3.7% 순임
- (성별) 남성 77.5%, 여성 22.5%
 - ※ 연령, 성별이 표시된 민원에 대한 통계
- (지역별) 서울이 37.6% (416건)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27.1% (300건), 인천, 부산, 대구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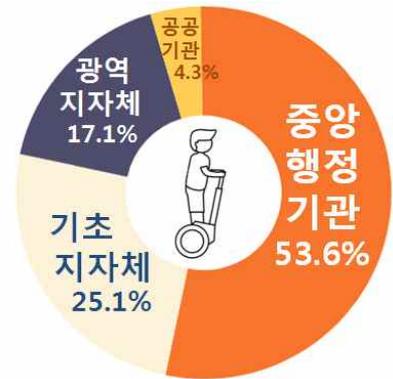
3 처리기관 현황

○ 중앙행정기관이 53.6% (692건)로 가장 많고, 기초지자체 25.1% (324건), 광역지자체 17.1% (221건), 공공기관 4.3% (55건) 순

-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35.3% (244건), 산자부 35.1% (243건)로 다수를 차지하고, 과기정통부 18.1% (125건), 국토부 5.3% (37건), 행자부 2.0% (14건) 순임

- ☞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운행 등 단속요청, 교통사고' 민원이 다수
- ☞ 산자부·과기정통부는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인증·수입 문의', 국토부·행자부는 '제도 정비' 민원이 많음

<처리기관 현황>



- (기초지자체) 324건 중 경기 성남 (35건), 수원 (24건), 화성 (17건), 안양 (16건) 등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가 상위를 차지

- ☞ 성남 탄천, 수원 광교, 화성 동탄, 안양 안양천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

- (광역지자체) 221건 중 서울이 176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 10건, 세종과 울산이 각각 9건 순임

- ☞ 서울은 한강공원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요청, 그 외 지자체도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요청이 대부분

- (공공기관) 55건 중 한국소비자원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수자원공사 7건, 도로교통공단 5건 등임

- ☞ 한국소비자원은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보도에서의 단속요청', 도로교통공단은 '전동킥보드 제도 정비' 민원이 다수

도로교통법 (경찰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산업부, 과기정통부), 공원녹지법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국토부), 자전거법 (행안부), 소비자기본법(소비자원) 등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이 다수인 만큼 민원 처리기관도 다양

‘시군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고산업 육성 추진’

- 2019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 계획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는 시군구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일(화)부터 「2019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지원 계획」을 공고(2019년 예산, 114억 원)한다.

* 지역연고산업: 특정 지역에 특정한 산업 분야의 생산이 전통적으로 이어져서 관련 업체가 다수 존재하거나, 관련 기술이 전수되어 내려오는 산업

이번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자리 잡은 지역 혁신 기관을 중심으로, 23개 내외의 기업 지원 과제를 신규로 발굴·추진하며, 지역연고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비R&D 지원 프로그램 예시

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제품 제작 : 공예 기술 기반 금형 제조 - 전통 문양을 기존 제품과 접목하여 목업 혹은 금형 단계의 지원을 통하여 시제품 생산 2) 기술지도 : 화장품 제조 - 단순 식물 추출이 아닌, 식물 펩티드(Plant Peptide) 추출 기술을 활용한 향노화 원료로 신규化妆품을 만들어 고부가가치 제품의 창출을 지도 3) 디자인 : 안경테 제조 - 신소재인 지-클렉스(G-Clex)를 안경테로 개발하여, 아시아 및 유럽 등에서 얼굴형에 맞춘 안경테를 디자인 4) 마케팅 : 생활 도자기 제조 - 시군구 소재 도자기의 B2C 시장(홈쇼핑 등) 및 B2B 시장(공공 기관 및 지자체 등)의 판로를 지원 5) 시험 분석·인증 : 치과 용품 제조 - 시군구의 천연연료를 소재로 치과 용품을 개발한 경우, 시험 분석과 ISO 인증 및 cGMP(미 FDA 의약품 기준) 등을 획득 지원
----	--

‘2019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지원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지역연고산업을 주요 제조업*과 연계한 산업 분야
 - * 기계 제조, 금속 가공, 자동차·선박 부품, 화학 제품·화학 섬유, 정밀 기기 산업
- **(신청 기간)** '2019년 4월 19일(금)~4월 26일(금) 18:00까지
 - * 설명회: '2019. 3. 27(수) 14시~16시, 대전 DCC 컨벤션센터(3층 컨퍼런스홀)
- **(평가 요소)** 주요 제조업과 지역연고산업의 연계성 및 대·내외 경쟁력, 동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가능성 등
- **(신청 대상)** 지역연고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역량을 가진 지역 혁신 기관
 - * 지역 혁신 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K-ESP(연구개발전문기관) 등
- **(선정 절차)**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 실사·대면 평가를 실시, 5월 중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임
- **(평가 지표)** ① 연고산업의 경쟁력 ②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적절성 ③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고용, 매출, 수출 등) 등
- **(우대 사항)** ① 기존 지역 혁신 기관의 인프라(RIS, RIC, RRI, 지역특화센터 등)를 이용하여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일자리 선도특구' 내 특화 사업자를 50%이상 수혜 기업으로 포함한 과제 등

기타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접수 방법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교육자치와 온종일 돌봄체계 달성한다.”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총회 참석, 오산 돌봄센터’ 방문 -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19일(화) 오산시청에서 진행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 회원도시 48개) 총회’에 참석 후, 오산시 ‘함께자람센터’에 방문할 예정이다.
 -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부총리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교육협력에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다각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밝힌다.
 - 이어지는 정책간담회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비롯한 지자체의 교육자치, 온종일 돌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특히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학교시설 개방, 공간재구성과 관련해 공통분모를 가진 교육부 공간혁신 계획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찾는다.
- 이어서 부총리는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 오산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을자원(오산교육재단, 오산체육회, 착한식당 등)을 활용하여 방과후·방학중에 오후·저녁돌봄 제공
 - 오산시는 범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로서,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역, 혁신교육지구 사업 100개 지역,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지원사업 18개 실시

- 유은혜 부총리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와 마을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 “오산시 등의 우수한 돌봄 운영사례가 널리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또한 “앞으로도 혁신교육지구와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중앙정부는 물론 학교와 마을이 서로 힘을 합쳐,
 - 미래 세대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꿈을 꾸고, 지역 내 많은 교육주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힌다.

- 【붙임】** 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총회 참석 및 온종일돌봄 현장 방문 일정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소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총회 참석 및
온종일돌봄 현장 방문 일정

□ 개요

- 일시 : 2019.03.19.(화) 13:00~17:00
 - ※ 부총리님 일정 13:30~17:00
- 장소 : 오산시청 및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다함께돌봄센터)
- 대상 : (총회) 지자체장 16명*(총 150여명) / (온종일돌봄) 센터관계자 등 20여명
 - ※ 성동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관악 송파 강동 안양 화성 시흥 광명 오산 여주 홍천 공주
- 주관 : (총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 (온종일돌봄) 오산시

□ 일정

구분		시간		진행	비고
총회	총회 (2층 회의실)	13:00 ~13:30	30'	<input type="checkbox"/> 인사 : 협의회장 <input type="checkbox"/> 정기총회	<p>[부총리 동선]</p> <p>(13:30) 1층 로비 (박람회 관람)</p> <p>↓</p> <p>(13:40) 2층 회의실 (정책 간담회)</p> <p>↓</p> <p>(14:30) 3층 대회의실 (관람, 축사, 촬영, 경청 등)</p> <p>↓</p> <p>(15:30) 이동 (15분 / 8km)</p> <p>↓</p> <p>(16:00)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및 인근 간담회장 (라운딩, 인사, 간담회 등)</p>
	정책 간담회 (2층 회의실)	13:40 ~14:25	45'	<input type="checkbox"/> 인사 : 협의회장/ 부총리 / 지자체장 <input type="checkbox"/> 정책 제안 및 답변 : 협의회장/ 부총리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공헌 혁신 계획 발표 : 김태은 보좌관 <input type="checkbox"/> 질의응답	
	우리도시 이야기 (3층 대회의실)	14:30 ~15:30	60'	<input type="checkbox"/> 축하공연 <input type="checkbox"/> 참석단체(장) 및 내빈 소개 <input type="checkbox"/> 축사 : 부총리 <input type="checkbox"/> 기념 촬영 <input type="checkbox"/> 회원도시 이야기 : 단체장 사례발표	
온종일 돌봄	현장방문 / 간담회	16:00 ~17:00	60'	<input type="checkbox"/> 센터 라운딩 <input type="checkbox"/> 인사 : 부총리 <input type="checkbox"/> 관계자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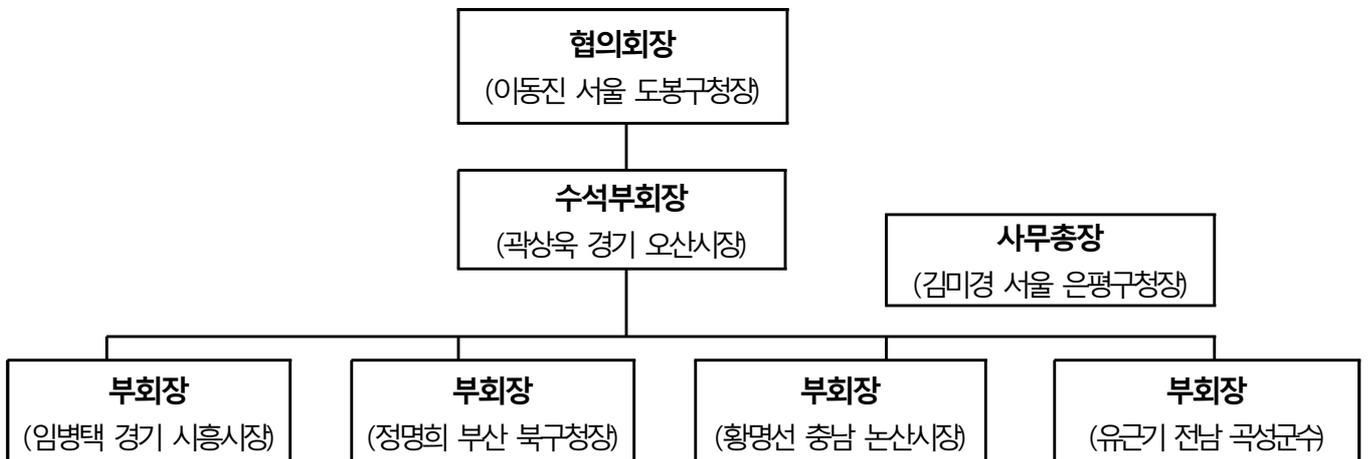
※ 지역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첫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 추진 배경

- 지방분권과 권한이양에 따른 정책분야별 정책의견 수렴 분위기 고조
 - ※ 교육분야 :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부-지자체 합동 회의(2017. 9. 30.) 등
-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 사업 증가
 - ※ 혁신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 등 교육청-지자체 협력사업
- 범부처 관련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중앙과 지방 간 소통 증가
 -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극복, 도시재생 등
- 교육자치 재량권 확대로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지방정부 참여 촉진

□ 추진 현황

- 창립 총회 : 2018. 3. 31 (31개 지자체 등 참여)
 - ※ 회장 선임 및 임원 구성(회장: 금천구청장, 사무총장: 도봉구청장), 출범선언문 채택
- 총회 및 컨퍼런스 개최 : 2018. 10. 10.
 - ※ 19개 회원도시의 장 및 부총리/BH 비서관(4명) 등 47개 기관 150여명 참석
 - ※ 협의회장 선출 및 임원 선임 현황



□ 운영 방향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협업을 통한 지역교육 혁신
-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 중앙(교육부)과 지방 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 촉진
- 혁신 성과 공유 및 교육계와 소통하는 새로운 정책의 창 역할 수행

□ 10대 과제

1. 혁신교육지구 확산 및 지속운영

- 혁신교육지구를 통한 지방정부·교육청 간 협업유지
-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

2. 은종일돌봄체계 구축

-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운영모델 개발
- 마을프로그램 및 마을교사 전문성 강화

3. 아동친화도시 조성

-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정책 (예시 아동청소년동행카드)
- 청소년 거점 공간 확대 :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 정서심리 지원 : 청소년 통합상담 지원체계 마련

4. 학부모회 네트워크 활성화

- 학교별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지방정부 지원조례 제정
- 학교 간·권역별 학부모회 네트워크 구성 정책 수립
- 시민참여학교 운영

5. 학교시설 개방 및 공간 리모델링

-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마을·학교 연계 운영
- 청소년 프로젝트형 공간 리모델링 기획

6. 마을교육과정 개발

- 마을의 우수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접목
- 마을교과서 등 교재 및 교육 기자재 제작 및 배급

7. 지방정부 주도의 청소년 활동 지원

- 청소년 문화예술 공간설치, 영화·연극 및 뮤지컬 프로그램 지원
-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자치활동 지원 : 청소년의회, 학생회연합회, 청소년 동아리 등

8. 세계시민·다문화 지원

- 아동·청소년 세계시민교육 지원
- 이주민·다문화 가정·학생 등 참여 프로그램 개발
-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평화통일 교육지원

9. 교육 관련 사회적경제 육성

- 학교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지원사업 마련
-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학교 우선구매 촉진

10. 도·농 상생 급식 지원 사업

- 도농 협약을 통한 우수 농·축산물 식자재 납품
- 도시농업 프로그램 육성, 도농 간 체험 및 교류활동

□ 회원도시 현황: 4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019년 2월 현재, 지방자치단체 건제순)

지역	지방자치단체명	비고
서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4
부산	북구	1
인천	미추홀구	1
광주	서구	1
대전	대덕구	1
경기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의정부시, 시흥시, 광명시, 오산시, 여주시	10
강원	원주시, 홍천군	2
충북	보은군	1
충남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3
전남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4

(지방자치단체 건제순)

선도학교 우수사례와 노하우로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뒷받침

- 지역 내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 거점 역할 수행하는 선도학교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0일 2019년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올해는 소프트웨어교육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작년보다 191곳을 추가하여 총 1,832개교*를 선정하였다.
 - * 초등학교 1,081개교, 중학교 461개교, 고등학교 279개교, 특수학교 11개
-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 (초) '19년부터 5~6학년군 '실과' 교과에서 17시간 이상 필수 이수
(중) '18년부터 1~3학년군 '정보' 교과에서 34시간 이상 필수 이수
 - ** ('15)228개교→('16)900개교→('17)1,200개교→('18)1,641개교→('19)1,832개교
- 이를 통해 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 교육 사례가 인근학교로 확산되는 등, 선도학교가 지역 내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 역시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반응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선도학교 노하우 및 우수 교육 사례의 일반학교 확산 예시

■ (강원) 철암초

학생 동아리 운영, 융합형 교수학습자료 등을 개발, 지역사회(폐광 지역)의 관내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캠프를 운영, 전국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 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우수사례 확산

■ (경기) 광명북중

매년 지역 내 인근 중·고등학생 대상의 ‘소프트웨어교육 캠프’를 실시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분야의 심화 학습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선도학교의 우수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확산

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의견

■ (서울) 충암중 000 학생

“저는 학원 다닌 적이 전혀 없고, 중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웠어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실습하면, 나중에 집에서 따로 할 때도 잘 되더라구요.”

“과목 특성 상 점진적으로 사고력이 길러지는 거 같고, <중략> 기계가 사람의 일 자리를 대신하는 위협적인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 접종’ 같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 (경기) 과천고 000 학생

“프로그래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공학적인 문제해결’ 분야에 적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로를 ‘기계 공학’으로 결정했어요.”

“미적분 문제만 열심히 풀었는데... 로봇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수학·물리 시간에 배운 원리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수학, 과학에 더 흥미를 갖고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었어요.”

□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그간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의 현장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2016년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해 교원 확보 및 연수, 예비 교원 역량 강화, 기반 확충, 교사 연구회·학생 동아리 운영,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2017년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을 전면개정(18년 시행)하여,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임창빈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역량인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창의직무 위주로 일자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며,
 -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기본소양으로 체득하여 미래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학교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도학교 대상 착수 워크숍을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6개 권역에서 개최한다.

4.4(목) 13:30~17:00	4.8(월) 13:30~17:00	4.10(수) 13:30~17:00	4.15(월) 13:30~17:00	4.17(수) 13:30~17:00	4.18(목) 13:30~17:00
영남권 I (부산, 경남)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영남권 II (대구, 울산, 경북)	수도권 I (서울, 인천, 강원, 제주)	수도권 II (경기)
해운대 그랜드호텔	대전 컨벤션센터	김대중 컨벤션센터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더케이호텔 서울	더케이호텔 서울

평창올림픽 1주년, 평화·참여·젊음을 노래하다

- 3. 17. 평창에서 열리는 1주년 마무리 공연에 이승환, 국카스텐, 전인권밴드 등 참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1주년 기념행사를 마무리하는 ‘평창의 봄-평화 록 축제(PEACE ROCK FESTA)’ 공연을 3월 17일(일),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 백령도 기념음악회[2. 1.(금)]를 시작으로 ▲ 서울 기념음악회 및 올림픽의상 회고전[2. 9.(토)] ▲ 백령, 제주, 대전, 광주, 부산, 울릉 지역행사[2. 1.(금)~20.(수)], ▲ 생활체육스노보드·동계캠프[2. 15.(금)~18.(월)], ▲ 패럴림픽 1주년 기념포럼[3. 9.(토)] 등 다양한 문화·체육행사와 포럼을 진행했다. ‘평창의 봄-평화 록 축제(PEACE ROCK FESTA)’는 2월부터 이어져 온 평창올림픽 1주년 축하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평창의 봄’은 봄날에 평창에서 열리는 축제를 표현함과 동시에 겨울축제로 시작한 평창올림픽의 성과들이 한반도에 봄(평화)을 가져다 준 것을 기념하고 생명이 움트는 봄과 함께 그 성과가 우리 사회로 확산되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평화, 참여와 젊음’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 ‘록 공연’, ▲ ‘평화 - 기억·소망 프로젝트’, ▲ 평창올림픽 사진전, 동계종목 체험전, 평창올림픽 소감 남기기, 올림픽 공식 영화 상영 등을 운영한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주역인 참가 선수들도 초청을 받아 1주년 행사의 마지막을 함께한다.

‘평화, 참여와 젊음’, 평화를 록으로 노래한다

평창올림픽의 개·폐회식이 열렸던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젊음의 록 공연이 열린다. 이승환, 국카스텐, 전인권밴드, 크라잉넛, 윤수일밴드, 데이브레이크, 이디오테이프, 아도이, 배희관밴드, 잠비나이, 로맨틱펀치가 뜨거운 음악을 들려준다. 작년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공연 등에 참여했던 국카스텐의 하현우, 전인권밴드, 배희관밴드, 잠비나이는 이번 1주년 마무리 공연에서 평창의 기억을 되살려 줄 예정이다.

‘평화를 말하다’ - 기억·소망 프로젝트

‘평창-기억·소망 프로젝트’는 무대에 올라가는 음악인들과 관객 등 ‘평창의 봄’에 온 모든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기획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기획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가장 큰 유산인 평화에 대한 다양한 기억과 소망을 꽃 스티커에 적어 수호랑과 반다비 조형물을 장식한다. 기획자들이 현장에서 참가자들과 소통하며 이번 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창을 돌아보다’ - 올림픽 사진전, 올림픽 영화, 동계종목 체험

평창올림픽의 준비부터 개막식, 경기 주요장면, 남북단일팀의 감격적 순간과 폐막까지 평창올림픽 전반의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평창올림픽 사진전도 이어진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직접 제작해 스위스 현지에서 공수된 평창올림픽 공식 영화 ‘크로싱 비욘드(Crossing Beyond, 100분)’을 통해서는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수호랑과 반다비 사진촬영 구역(포토존) 등 관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준비했다.

공연 관람권 사전 예약자 기념품 제공 및 원거리 관람자를 위한 셔틀 운영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공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월 27일(수)

부터 예약을 시작한 관람권 1차분 4,000장은 예약이 마감되었고, 현재 1,000장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공연 관람권 사전 예약자에게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공연관람 편의를 위해 서울과 평창 간 왕복 셔틀버스(자비 2만 원 부담)도 운영한다.

* 티켓 예약(무료): <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219251/items/2996992>

** 셔틀버스 신청: <https://bit.ly/2BYA2Xv>

평창올림픽 1주년, 평창의 평화를 넘어 한반도 평화의 완성으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다양한 1주년 행사는 국민들이 평창올림픽의 의미와 성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를 마무리하는 ‘평창의 봄-평화 록 축제(PEACE ROCK FESTA)’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평창올림픽의 유산과 올림픽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지원·제도개선 방안 마련, 결의대회 개최 등 -

《 주 요 내 용 》

- 금년도 '논타작물재배'(목표 55천ha) 참여 확대를 위한 농업인 및 지자체·생산자단체 추가 지원대책 마련

대 상	추가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①공공비축미 배정(35만톤 계획물량 중 참여농가에 5만톤 직접 배정), ②논콩 전량수매 및 수매가 인상(4,200원/kg→4,500, 특등신설), ③농협 무이자 자금(2천억원→3), ④농지은행(비축임대,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생산자단체 	①주산지일관기계화(40개소, 개소당 2억원), ②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배수개선·용수개발), ③지역개발(일반농산어촌·신활력플러스), ④RPC(벼 매입자금 4천억원 목표대비 70% 이상 시군 시설 우선 지원), ⑤조사료 등

- 농업인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지침 개정)

- (기존) '18년 사업 참여농지 + '18년 벼 재배 농지 → (개선) 기존 + 다른 사업에 의해 부과된 논 타작물 재배 의무가 해제된 농지 등 참여 농지 추가

* 일부 농업인 신청 누락 등 '19년 벼 재배 회귀 방지를 위해 참여 농지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 금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를 통한 상호 협력·참여의 장(場) 마련

- 일시/장소 : '19.3.21.(목) 15:00~17:30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주요 내용 : 관련기관·단체, 지자체 등 370명 내외 인원이 참여, 관련기관 단체 간 업무협약 체결, 우수사례 발표 등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19년 55천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

(19.1.22~6.28, 읍면동 사무소 신청) 중이다.

※ 3.18일 현재, 신청 면적 5,110ha(목표대비 9.3%)

- 농식품부는 금년도 농업인의 논타작물재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참여 농업인과 지자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업인 추가지원 방안 》

① 공공비축미(19년 계획물량 35만톤 중 5만톤) 인센티브 배정

- 공공비축물량 35만톤 중 5만톤은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 ha당 65포대 내외 직접 배정(전체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물량 변동)
- 30만톤은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사업 신청실적을 반영하여 사업 참여가 많은 지자체에 배정 물량 확대

② 논콩 전량수매 및 수매가 인상(3.7일 발표)

- 수매물량을 60천톤(18: 55천톤)으로 확대하여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생산한 논콩은 전량 수매
- 수매가격은 특등규격을 신설*하면서 4,500원/kg으로 전년(일반콩 대립 1등 기준 4,200원/kg) 대비 7.1% 인상

* 정립비율(90%→95), 낱알 고르기(70%→90)를 상향하여 수매콩의 품질 제고

③ 농협 무이자 자금 및 농기계 지원

-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축협에 총 3,000억원 지원(18: 2천억원) →

조합원에게 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ha당 영농자재(11만원) 또는 조사료 유통비(22만원) 지원

* ha당 무이자 자금 500만원(경종) 또는 1,000만원(조사료) × 2.15%(상호금융예치금 이자율) × 예치기간 12개월 = 11만원/ha 또는 22만원/ha

○ 지역농협에 콩 파종기·수확기 등 타작물 재배 농기계 10억원 지원

⇒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중 일부를 콩 재배로 전환한 농가의 경우, 지원 단가(325만원/ha) 이외 추가 지원

* 콩 전환농가 지원금: ('18) 280만원/ha → ('19) 325만원/ha(금년도 단가 인상)

** 추가 지원(공공비축미 별도 배정+콩 수매가 인상+농협 영농자재 지원 등)

④ 맞춤형 농지 지원(농지은행 비축임대·농지매입) 지원 우대

○ 지원대상자 선정시 본인 소유 논 경영면적의 10% 이상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게 가점 부여(가점 총 15~20점 중 5~10점)

* '비축임대'는 가점 20점 중 타작물 재배 가점 최대 10점, '농지매입'은 가점 15점 중 타작물재배 가점 5점 부여

《 지자체 추가지원 방안 》

① 농기계임대사업소(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

○ 타작물 재배 농기계가 추가 필요한 시·군의 공동경영체 등에게 40개소 내외*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추가 지원

* 개소당 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19년 220개소 지원 예정이며, 1·2차 신청 접수 결과 108개소 선정, 3.8~3.22일까지 3차 접수 진행 중(112개 추가 선정 예정)

< 참고 :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

■ (사업내용) 경운정지부터 수확 후까지 작업 단계별 발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공급

■ (장기임대 기간) 임대농기계 내용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내용연수(ex 동력 파종기 5년, 동력수확기 5년 등)

■ (장기임대료) 구입한 임대 농기계의 내용연수 동안 구입가의 35%를 임대료로 징수(연 1회)

② 배수 등 기반정비 지원

- (배수) 사업 참여 필지는 우선적으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사업 참여 우수 시·도는 기본조사면적 우선 배정('19년 기본조사 면적 2천ha의 5%)

* 국가관리지역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자체 구역은 배수개선사업을 활용

- (용수) 기본조사 및 신규지구 선정시 사업 참여 우수 시·도 우선 배정

③ 지역개발 지원 우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9년 4,361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19년 245억원)의 '20년 신규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④ RPC 지원

- RPC 운영자금 1.2조원 중 4천억원을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 (관할지역 기준 사업면적×ha당 800만원, 무이자)
- RPC 시설지원사업('19년 143억원)의 '20년 신규 대상 선정시 시·군별 목표면적 대비 70% 이상 시·군은 우선 선정

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조사료 대량 수요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촉진비 (지원 대상 확대·단가 인상*)

* (기존) TMR공장, 10원/kg → (개선) TMR공장+축산농가 추가, 20원/kg

-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일부 유보 및 혼합건초 현물점검(3.21~) 등 관리강화

□ 아울러,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인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대상 농지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지침을 개정(3.18)하였다.

- '19년부터 논타작물재배 의무기간이 해제된 농지*, 농업인의 신청

누락 등으로 인해 '18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지를 사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 예를 들어, 현행 사업대상은 “'18년 사업 참여농지 + '18년 벼 재배 농지”로 한정되어 있어, '17년 벼 재배 농지 중 '18년 농진청 신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여 타작물을 재배한 농지는 금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 '18년 농식품부 외 지자체가 자체 시행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도 '19년 정부 사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 '19년 벼 재배 회귀 방지를 위해 참여 농지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 또한, 농식품부는 3월 21일(목)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정부세종컨벤션센터(3층 국제회의장) 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 행사 및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붙임 참조)한다.

* (업무협약) 농식품부, 농협,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 본 행사에서 김종훈 차관보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농업인의 타작물재배 참여가 저조할 경우 쌀값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단체가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참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성공 결의 대회 행사 개요

- 일 시 : 2019. 3. 21.(목) / 15:00~17:30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3층, 국제회의장)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
- 참석인원 : 370명 내외(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
- 주요내용
 - '18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유공자 장관표창
 - 추진경과 보고(식량산업과장)
 - 농식품부·단체 간 업무협약식(농식품부·8개 농업단체)
 - 쌀 생산조정 결의문 낭독(농업인·지자체 대표)
 - 쌀 생산조정 당면현안 설명(식량정책관)
 - 논 타작물 전환 현장기술지원 방안 설명(농진청) 등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30~15:00	30	◦ (등록) 참석자	· 식량산업과
15:00~15:05	5	◦ (개회) 국민의례	· 사회자
15:05~15:10	5	◦ 주요 내빈 소개	· 사회자
15:10~15:20	10	◦ 시상식	· 차관보
15:20~15:25	5	◦ 차관보 인사말씀	· 차관보
15:25~15:35	10	◦ 쌀 생산조정 추진경과 보고	· 식량산업과장
15:35~16:00	25	◦ (MOU) 유관단체와 업무협약 * 협약서 서명 후 사진 촬영	· 차관보, 단체장
16:00~16:10	10	◦ (결의문) 농업인·지자체 대표	· 각 1명
16:10~16:20	10	◦ 휴식	
16:20~16:50	30	◦ 쌀 수급안정 당면현안 설명	· 식량정책관
16:50~17:10	20	◦ 현장기술지원 방안 설명	· 농진청
17:10~17:30	20	◦ 우수사례 발표 * 한은성 대표(김제 죽산콩영농조합)	· 사례발표
17:30~	-	◦ 종료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세계 물의 날 행사 개최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3월 22일 오후 2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한다.
 - ‘세계 물의 날’은 먹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에 전 세계의 참여와 협력을 늘리기 위해 유엔(UN)에서 1992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지정해 선포한 날이다.
 -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 유엔이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의 주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eaving no one behind)’이며, 인종·지위·종교 등에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1억 명이 가정에서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염된 물과 불결한 위생으로 하루에 700명 이상의 5세 미만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있다.
 - 이와 연계하여 환경부는 물의 날 국내 주제를 ‘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로 정했다.
 - 지난해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세계 물의 날’의 의미를 살려,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책적 도약과 국민들의 참여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 특별히 이번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대구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인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 올해 하반기부터 물기업은 물산업클러스터에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지원(서비스)을 일괄(원스톱)로 받을 수 있다.

※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진흥시설(물융합연구센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워터캠퍼스), 기업집적단지 등으로 구성

- 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를 우리 물기업 해외진출의 전초기지이자 국제적인(글로벌) 물산업 중심축(허브)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3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와 연계한 '통합물관리 정책세미나', '2019 워터 코리아(WATER KOREA)'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 '통합물관리 정책세미나'는 환경부와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유역물관리, 기후변화, 지방·광역 상수도 연계, 지하수, 물산업 해외진출 등을 주제로 미래의 통합물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 이 행사의 개최식(3월 20일)에서는 환경부가 후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최한 '2019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상(UCC)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다.

*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는 내용의 영상을 공모하여, 대상(환경부장관상) 1명, 최우수상 등 총 15편에 대하여 시상

- '2019 워터 코리아'는 국내 최대 물 산업 박람회로 국내 물 기업들의 상하수도 관련 기자재 및 운영·관리 등 물 산업 전 분야 기술 및 제품을 전시하고, 국제포럼, 학술세미나 등 물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선보인다.

이 행사에서는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의 산실인 ‘대한민국 물산업기술대전’이 개최되어 지능형(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등 5개의 우수기술 제품과 2곳의 ‘혁신새싹기업(스타트업)’이 선정되어 3월 22일까지 워터코리아 특별관에 전시된다.

- 이와 함께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다.
 - 대전에서 ‘물순환 사전 협의제 워크숍’, 청주에서 ‘충북 물포럼 세미나’가 열리는 등 전국에서 7만여 명이 참여하는 기념식, 학술대회, 사진전, 하천정화활동 및 체험행사 등이 진행된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은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라며,
 - “정부는 수질·수량·수생태계가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이루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 명의 국민도 소외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19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요.
2. 통합물관리 정책세미나 개요.

※ 관련 행사 사진 및 영상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3월 22일 15시부터 순차적 게재)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9. 3. 22(금) 14:00~14:40, 대구광역시 엑스코(EXCO)
- 주 최 : 환경부
- 행사내용 : 식전 행사, 유공자 포상, 축사, 주제영상 상영, 세레모니 등
- 참가자 : 환경부 장관, 시민단체·기업·학계 관계자 등 1,300여 명

□ 행사주제

- 유엔 공식주제 : Leaving no one behind
 - * 인종, 성별, 지위 등에 차별받지 않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 국내 공식주제 : 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 *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전국 방방곡곡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겠다는 취지

□ 행사 내용

- 식전 행사
 - 참가자 환영 및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프로그램 안내
 - '역사 강사가 들려주는 물 이야기' 상영
 - 명사(名士) 인터뷰 홍보영상 상영
- 공식 행사
 -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
 - 주제영상 상영
 - *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자연과 함께 풍요롭게 누려야 함을 영상으로 표현
 - 정부포상 수여
 - * 유공자 총 4명(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에 대한 수여

- 축사
- 주제 공연 및 세레모니 퍼포먼스

※ 최근 10년간 세계 물의 날 주제

연도	유엔 주제	국내 주제
2018	Nature for Water	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
2017	Wastewater	하수의 재발견,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2016	Water and Jobs	물과 일자리
2015	Wat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물과 지속가능한 개발
2014	Water and Energy	물과 에너지
2013	International Year of Water Cooperation	물! 우리가 나눌 때 비로소 모든 곳에서 흐른다
2012	Water and Food Security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
2011	Water for Cities	건강한 물, 녹색강국의 원천
2010	Communicating Water Qualit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나부터 물사랑, 더 큰 대한민국
2009	Transboundary Water	강의 재탄생

붙임2

통합물관리 정책세미나 개요

□ 추진 목적

-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 맞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 정책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19. 3. 20(수) ~ 3. 22(금), 대구 엑스코(EXCO)
- (참석대상) 지자체, 물 관련 기관, 학계, 연구계, 환경단체 등
- (주최)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물학술단체연합회 공동
- (주관) 물환경학회, 수자원학회, 상하수도학회, 지하수학회, 농공학회, 방재학회, 상하수도협회, 물산업협의회, 한국물포럼
- (후원)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상하수도협회

□ 세미나 일정

일 시		장 소	320호	322호
	14:00~14:30		개회식 및 UCC 공모전 시상식	
3.20 (수)	14:30~16:00		〈세션 1〉 통합물관리 정책 방향 (환경부, 물학술단체연합회)	
	16:10~18:00		〈세션 2〉 유역 물 관리 개선방안 (물환경정책과, 물환경학회)	〈세션 3〉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개선방안 (생활하수과, 상하수도협회)
3.21 (목)	10:00~11:50		〈세션 4〉 기후변화대응 수자원정책 방향 (수자원정책과, 수자원학회)	〈세션 5〉 통합물관리에 부합하는 지하수 관리 및 정책방향 (토양지하수과, 지하수학회)
	14:00~15:50		〈세션 6〉 물복지와 상하수도 미래 (수도정책과, 상하수도학회)	〈세션 7〉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의 역할 (농림부 농업기반과, 한국농공학회)
	16:00~17:50		〈세션 8〉 재난관리 측면에서 본 통합물관리 (행안부 기후재난대응과, 한국방재학회)	〈세션 9〉 지방-광역상수도 효율화 방안 (수도정책과, 상하수도학회)
3.22 (금)	10:00~11:50			〈세션 10〉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물산업클러스터, KWP, KWF*)

* KWP : 물산업협의회, KWF : 한국물포럼

자치단체 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 경기도 수원시, 전라남도 순천시, 대전광역시 등 16개 선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1일에 청년센터* 운영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된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발표했다.

* 청년센터란 청년들이 취업·창업, 복지·문화교류 등 기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

○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수원시, 강원도 원주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포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순천시이다.

□ 고용노동부는 각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청년센터 운영」사업: 지역 청년의 취·창업 교육 지원, 지역 청년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프로그램에 1억 2천만 원씩 16개소 지원

* 「청년 진로탐색 도우미」사업: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장기 미취업 청년 등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진로탐색,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6천만 원씩 8개소 추가 지원(국민참여예산)

○ 또한 선정된 기관들이 청년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공동연수·상담 등을 제공한다.

□ 이번에 선정된 16개 자치단체들은 스스로 세운 운영 계획에 따라

청년 정책의 통합 안내, 취·창업 역량강화, 청년 활동(동아리, 소모임 등)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 [전라남도 순천시] 청년이 만드는 청년희망생태계 조성

- 순천시는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순천시카카오톡 등)를 운영하고, 청년정책 통합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 청년멘토링 사업(멘토 48명 확보), 일자리 카페(직업상담사 1명 상시 근무), 청년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역량을 높인다.
- 또한, 청년활동포인트제,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 ‘청년UP’, 청년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꿈청시리즈’(꿈청특강, 꿈청식탁, 꿈청극장 등)로 청년 활동과 관계망 강화를 돕는다.



○ [경기도 수원시] 청년! 신나고 호감가는 더 큰 수원

- 수원시는 자신만의 진로설계 포트폴리오를 제작·발표하는 ‘진로 설계학교’와 청년과 기업, 대학 간 협력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하는 ‘수원청년 UP클라우드’사업으로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 청년의 해외 취업지원을 위한 ‘글로벌 수원청년’과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의 길’, ‘창업의 길’을 운영한다.
- 또한, 멘토·청년소그룹 만남으로 청년문제와 지역현안 문제를 발견하는 ‘수원청년 On Air’, 전문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과 고민을 랩으로

완성하는 '마음의 소리' 프로그램으로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돕는다.



- 전국의 청년센터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참여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김성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이용하여 지역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취·창업 역량과 사회참여 역량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① **[추진배경]**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의 수요를 반영, 청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정책 통합 연계나 내실있는 프로그램 지원에는 한계
- * ①공간·검색 PC 제공 위주, ②행사위주(버스킹, 플리마켓 등), ③운영기관의 성격에 따라 취업특강 등 특정분야 프로그램 운영

- 청년센터의 청년정책연계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 지역 내 청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청년센터 운영 지원 필요

- ② **[예산]** 24억원 편성, 「청년센터 운영」 사업 16개소* 19.2억원, 「청년 진로 탐색 도우미」(국민참여예산) 사업 8개소 4.8억원 지원(중복 지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 기본 매칭비율 8 : 2(국비 : 지방비)

* 8개 청·대표지청 중 서울청 3개소, 강원지청 1개소, 그 외 2개소 선정·지원

③ **사업 기본방향**

-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를 통해 정부·지자체 청년정책 연계 서비스 및 청년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청년 관계망 지원, 심리상담,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청년 주도 프로그램 기획·참여 등

- (정책연계) 청년정책 정보 제공 및 청년공간 운영자에 대한 청년정책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정부·지자체 정책정보 연계기능 수행

- (역량제고) 청년의 주도적 참여욕구를 감안하여 참여형의 진로·구직·사회참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 (온·오프라인 연계) 온라인 정책정보 및 오프라인 공간 활용도 제고

온라인 청년센터	오프라인 청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 DB 구축 및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www.youthcenter.go.kr) ▪ 오프라인 센터 프로그램(상담 등) 이용 안내 및 예약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정책DB 활용 및 환류제공 (공간운영자 대상 교육 실시 예정) ▪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한 프로그램 홍보로 청년참여 활성화

붙임 2

지방자치단체 선정 결과

사업심사·선정 청(대표지청)	선정 자치단체	컨소시엄 기관	지원규모
서울청	서울시 동작구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1.8억 원
	서울시 금천구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1.2억 원
	서울특별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양천상상마당	1.2억 원
중부청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ITP)	1.8억 원
	경기도 고양시	(주)조은일 컴퍼니	1.2억 원
경기지청	경기도 시흥시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1.8억 원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1.2억 원
강원지청	강원도 원주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8억 원
대전청	대전광역시	(주)임팩트 메이커	1.8억 원
	충청북도	(재)충청북도 기업진흥원	1.2억 원
대구청	대구광역시 동구	(사)대구경북 고용복지연구원	1.8억 원
	경상북도 포항시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1.2억 원
부산청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1.8억 원
	경상남도	경남발전연구원	1.2억 원
광주청	전라남도 영광군	(재)전남인력개발원, 청소년자람터 오늘	1.8억 원
	전라남도 순천시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1.2억 원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기관 선정(새일센터 전국 35개소) -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이 일자리를 얻고 다시 경력단절되는 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취업 뿐 아니라, 재직여성의 경력단절까지 예방하기 위한 경력단절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 새일센터 :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대상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기관

- 우리나라의 낮은 여성고용률*('18년 50.9%, 男70.8%)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며, 경력단절 이후 사회 복귀 기간이 평균 8.5년으로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볼 때, 경력단절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OECD 기준 여성 고용률 57.2%('18년, 男75.9%)

- 이에 여성가족부는 시·도별 광역·거점 새일센터 중심으로 전국 15개소에서 시범운영하던 경력단절예방사업을 지역 센터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사업 주요내용) 재직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전문 상담(노무 및 고충상담), 직장 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경력단절예방 캠페인 등('17. 8월~)

□ 경력단절예방지원 사업은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및 직장문화개선으로 나뉘어 전개된다.

- 재직여성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를 위한 경력개발상담, 직장적응을 위한 간담회, 동종 업계 선배와의 상담·지도 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지원한다.
-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문화 개선교육 및 워크숍, 직무 재설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 만들기에 앞장선다.

□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주요 사업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충북 제천새일센터는 선임근로자 및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취업 여성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직장적응을 지원하는 직종별 1:1 멘토링인 '현장에서 길을 묻다'를 실시한다.
- 충남 공주새일센터는 재직여성의 직장적응을 위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고충 공유를 위한 취업자 간담회 '열정맘을 능력맘으로'를 개최한다.
- 대구 남부새일센터는 육아·가족돌봄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후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직장적응훈련 등을 제공하는 육아휴직 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 사례는 아래와 같다.

-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는 새일센터 구인등록기업의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남녀고용차별개선,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고
경력단절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찾아가는 기업체 교육'을 운영한다.

- 충북광역새일센터는 기업 인터뷰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파악하고,
여성 고용구조에 대한 체질개선, 성평등한 인사관리 지원 등 기업 맞
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행복일터 경영컨설팅' 사업을 운영한다.

□ 이견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 고용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성별임금격차, 장시간 근로문화, 여성의 독박육아, 여성의
고용환경 등 삶터와 일터 모두에서의 성차별 해소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없이 역량을 발
휘할 수 있는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력단절예방 사업
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새일센터 개요 및 현황

2.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사업 개요

□ 주요기능

-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 대상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 지정현황

(‘18.12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일반형	133	26	10	5	7	5	1	3	24	7	4	8	7	8	7	8	2	1
경력개발형	8	2	-	-	-	-	1	-	4	-	1	-	-	-	-	-	-	-
농어촌형	6	-	-	-	-	-	-	-	-	1	1	2	1	-	-	-	1	-
광역센터	11	1	1	-	1	-	1	-	2	-	1	-	1	1	1	1	-	-
총계	158	29	11	5	8	5	3	3	30	8	7	10	9	9	8	9	3	1

□ 지정 유형별 현황

구분	일반형센터	경력개발형센터	농어촌형센터	광역센터
사업 목적	▪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취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경력 단절 여성의 전공·경력 유관분야의 고 임금·양질의 일자리 취업 연계	▪ 농어촌 경력단절 여성의 농어업, 6차 산업* 분야 취·창업 지원	▪ 지역내 새일센터 역량제고를 위한 거점센터
센터수	133개소	8개소	6개소	11개소
지정시기	‘09년~	‘14년~	‘14년~	‘10~‘18년

* 6차 산업 :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 (예 : 농촌 관광산업 등)

□ 운영기관 유형별 현황

(‘18.12월 기준, 단위 : 개소)

계	여성인력 개발센터	여성회관		대학	지자체 (직영)	기타 법인·단체
		지자체 직영	민간 위탁 운영			
158 (100%)	59 (37.4%)	22 (13.9%)	16 (10.1%)	10 (6.3%)	15 (9.5%)	36 (22.8%)

□ 개요

- (목적) 재직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 (추진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2조(경력단절예방)
 - * 법 개정('17년)으로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추진현황) 새일센터 35개소(광역·거점 14개소, 지역 21개소)를 통해 재직여성, 구직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제공
 - * 15개소('17~'18년도) → 35개소('19년도)
- (사업예산) 19.7억원(국비 기준)

□ 사업내용

※ '선택사업'은 지역·기관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

- (광역·거점센터)

구분		사업내용	비고
여성 고용 유지 지원	경력단절 예방 상담·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고충상담 : 가족내 갈등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대화법 및 갈등해결, 가정문제, 스트레스 관리 등 ● 인사 노무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노무 상담 및 특강(개인, 기업) : 채용,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근무환경, 부당해고, 권고사직, 퇴직금, 성희롱·성차별, 출산 휴가, 육아휴직관련 모성보호제도 등 - 법무상담 :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등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교육 : 역량강화, 경력개발 및 관리, 일-삶 균형 관리(워킹맘, 스트레스관리, 대화법 등),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교육 등 - 직장에질, 조직 내 효율적인 의사소통법과 갈등해소법 관련 교육,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무 상식 등 근로자 대상 교육 	선택
직장 문화 개선 지원	개선 방안 개발·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회의: 여성들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 의견 공유 및 여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 방안 개발 ● 컨설팅 : 인사, 노무, 경영, 조직관리 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효율적인 직장문화 개선안 제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정보 제공 : 남녀고용차별개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마인드 교육, 인사, 노무, 경영, 조직관리 교육, 경력단절예방 지원 사업 안내 및 특강 	선택
경단 예방 협망	협력망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종사자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센터 종사자 교육 : 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 유관 정책 활용방법, 상담 및 사례관리 기법 교육 	
경단 예방 인식 개선	홍보, 우수사례 발굴·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크 콘서트·토론회 개최 : 전문가 패널, 사례발표자, 취업자 등 참여 ● 사례 발굴 : 경력단절예방지원 및 극복 우수사례 공모, 사례집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고용 우수기업 사례공유 및 발표, 언론 홍보 지원 	

○ (지역센터)

구분	사업내용	비고
여성 고용 유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개발상담 : 경력경로(career path) 설계 및 관리, 이직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고충상담 : 가족내 갈등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대화법 및 갈등해결, 가정문제, 스트레스 관리 등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노무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노무 상담(개인, 기업) : 채용,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근무환경, 부당해고, 권고사직, 퇴직금, 성희롱·성차별, 출산휴가, 육아휴직관련 모성보호제도 등 상담 - 노무지식 특강 : 채용계약서, 근로시간, 휴가, 성희롱, 퇴직 등 - 법무상담 :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등 	선택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간담회 : 유사직종별 취업자 네트워크, 경력단절예방 사례공유, 기업정보 공유,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도 고취 및 대인관계 기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및 1:1코칭 : 직종별 선배와의 멘토링, 경력단절 극복 성공선배(멘토) 연계, 창업선배와의 멘토링, 멘토링 커뮤니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일센터 이용자 취/창업동아리 지원 ● 직장 내 학습동아리 지원 : 직무역량, 경력개발, 취미, 스트레스 해소 등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교육 : 역량강화, 경력개발 및 관리, 일-삶 균형 관리(워킹맘, 스트레스 관리, 대화법 등), 직장적응 및 복귀 지원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예절, 조직 내 효율적인 의사소통법과 갈등해소법 관련 교육,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무 상식 등 근로자 대상 교육 	선택
직장 문화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회의: 여성들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 의견 공유 및 여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 방안 개발 ● 컨설팅 : 인사, 노무, 경영, 조직관리 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효율적인 직장문화 개선안 제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정보 제공 : 남녀고용차별개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마인드 교육, 인사, 노무, 경영, 조직관리 교육, 경력단절예방 지원 사업 안내 및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환경개선 : 여성 화장실·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선택
경력 단절 예방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우수사례 발굴·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고용 우수기업 사례공유 및 발표, 언론 홍보 지원 	선택

정부·지자체, 도로·철도·하천 등 노후시설 안전강화 '맞손'

- 15일 <기반시설 관리 정책 관련 시·도 간담회>서 적극 참여 당부 -

-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도로, 철도, 하천 등 노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반시설 관리 정책 관련 시·도 간담회」를 3월 15일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18.12월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20.1 시행,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이 법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가 올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인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작년말 제정된 기반시설관리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주요 시설*에 대해
 - * 도로, 철도, 하천, 댐, 공항, 항만, 상·하수도 등 (시설의 종류와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정 시 확정할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도 하여금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최소유지관리기준)를 설정·고시토록 하고 있다.

* 국토부장관은 최소유지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기준 마련

- 이에 국토교통부는 간담회를 통해 기반시설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하위법령 제정, 국가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설관리 공통기준 제정 등의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최소유지관리 기준 고시 등과 같이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 기반시설관리법 후속조치 등을 포괄하여 수립 예정인 노후 기반 시설 안전강화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세밀한 현황분석을 위해 각 지자체 소관 시설의 노후화 등의 유지관리 현황 자료 공유와 함께 향후 개선 과제 도출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후속조치 이행과 노후 기반시설 대책 수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 구현상 기술안전정책관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는 현재의 신규건설 중심의 SOC에서 향후 유지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회의 개요

- 時·所 : 3.15일(금), 14:00~15:30 / 국토부 6동 5층 중회의실(533호)
- 참석자 :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주재), 기술정책과장, 시설안전과장, 기반시설관리팀장, 담당 서기관·사무관, 시·도 담당 과장
- 안전
 - ① 기반시설관리법 주요 내용 설명 (기술정책과)
 - ②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공통기준 작성 방향 (시설안전과)
 - ③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 방향 (기반시설관리팀)

□ 회의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5')	인사말씀	기술안전정책관
14:05 ~ 14:35(30')	기반시설관리법 주요 내용 설명	오송천 책
	관리계획 수립, 공통기준 작성 등	이용재 事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 방향	기반시설관리팀장
14:35 ~ 15:25(50')	각 지자체별 의견수렴	
15:25 ~ 15:30(5')	기술안전정책관 마무리 말씀	

□ 관리체계

- (적용대상)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52종 중 국가·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공공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에서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시설
 - * 도로, 철도, 하천시설, 댐, 공항, 항만,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등(시행령 제정시 반영)
- (계획수립) 5년 단위 기본계획(국토부장관), 관리계획(관계장관/시도지사)을 수립하고 기반시설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이를 심의
 - * 국토부는 위원회를 지원하는 간사 역할
- (관리기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유지관리의 하한선인 **최소유지관리기준**, 유지관리에서 성능개선으로 전환하는 **성능개선기준**을 마련
 - * 국토부장관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

□ 재원대책

- (정부지원) 국가·공공기관은 물론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성능개선비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가능
 - * 다만, 건설 당시 재정지원이 없었던 지방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지관리비) 관리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유지관리비용 증액분의 50%한도로 국비를 지원하고, 성능개선비도 지자체의 성능개선총당금 적립액을 한도로 하여 지원
- (성능개선비) 관리계획 수립 및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 후 지원 가능
- (관리주체) 관리계획에 성능개선총당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반영
 - * 시설 노후화에 대비 성능개선 시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관리주체가 미리 적립
- 유지관리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조정($\pm 20\%$ p) 가능
- (사용자) 사용료의 10%의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
 - 실제 부담금 부과율은 시설 노후화 정도, 공공요금의 수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개별법에서 구체화하도록 규정

해수부-환경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이기 함께 나선다

-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항만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협력과제 발굴·시행 -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19일 서울 청사(별관 브리핑룸)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연간 4,636대, 국내 10%)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 총량 : 336,066톤 / 선박 : 32,300톤

○ 그동안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배출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 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0.1% 미만)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 적용(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

○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하여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이에 더하여,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양 부처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속적

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년 1월 1일) 전에 미리 양 부처 간 협업을 시작하여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라며, “앞으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해양수산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던 항만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환경부-해양수산부 업무협약식 개최계획.
2. 환경부-해양수산부 업무협약서. 끝.

□ 목적

- 선박 및 항만에서 비롯되는 미세먼지의 효율적 종합적 저감을 위해 해수부-환경부 간 상호협력 추진

□ 협약 개요

- 일시 : 2019년 3월 19일(화) 9:00~9:2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203호)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장관, 환경부 장관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 등

○ 주요내용

- 선박 연료기준 강화 및 친환경 선박·항만 인프라 구축
- 항만미세먼지 현황진단 및 항만출입 노후경유차 우선지원
- 고농도시 노후 경유차·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등 관리·지원 강화 등

2. 주요내용

□ (프로그램) 양 부처 장관 인사말씀 → 협약서 낭독·서명 → 기념촬영 순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9:00~9: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환경부 미세먼지대책 T/F)
9:05~9:08	협약내용 보고	해수부
9:08~9:11	해양수산부 장관님 인사말씀	해수부
9:11~9:14	환경부 장관님 인사말씀	환경부
9:14~9:16	협약서 서명 및 교환	환경부, 해수부
9:16~9:18	기념촬영	
9:18~9:20	폐회	사회자

* 협약식 전 양 부처 장관 간 환담회(8:50~9:00, 10분간)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약서

환경부, 해양수산부(이하 “양 부처” 라 한다.)는 해양-항만지역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양 부처 간 협력 체제 구축에 합의한다.

1. 양 부처는 항만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50%이상 저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재원확보, 법·제도 개선 및 홍보, 정보공유에 적극 협력한다.
2.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 선박과 하역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등 미세먼지 저감형 항만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항만도시의 대기질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3.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항만 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분석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하고,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4.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항만지역 내 하역장비 및 노후경유차량,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 배출원 관리강화 방안을 강구·시행한다.
5. 양 부처는 지속적인 상호협력과 의견 교환을 위해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 협약서의 효력은 양 부처의 장관이 서명한 때부터 발생하며, 협약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시행하기로 하고 이 협약서에 서명한다.

2019년 3월 19일

환경부
장관 조명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